

“濟州海女”와 해군기지: 관찰과 예측

전 경 수(서울대 인류학)

korancks@hotmail.com

1. 서: 論 “사회과학”

<제주학회>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은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제주학’에 대한 발표를 해달라는 것이었고, 필자는 그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필자가 생각하는 사회과학이라는 것에 대한 견해를 먼저 피력하고, 그 입장 위에서 제주학에 대한 관찰과 예측을 전제로 한 실증주의적인 사례들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나는 사회과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일말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과연 그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사회과학은 존재하는 것인가? 소위 ‘사회과학’과 소위 ‘인문학’의 경계는 무엇이며, 경계가 있다면, 어디에 존재하는가? 사회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간행된 경우의 하나를 인용한다. 정치학자 김세균은 사회과학의 경향을 “관찰과 예측을 전제로 한 실증주의적 경험과학”과 “사실인식에 기초한 해석과 비판을 목적으로 한 해석학적 비판과학”(김세균 2011. 7. 20: 15)으로 대별하고, 후자를 자신의 제안이라고 전제하였다. 그의 주장에 대해서 나는 단연코 “아니다”라고 대응하고자 한다. 그것은 과학을 포기한 입장으로 치달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자의 차원에서 달성되어야 할 ‘관찰’과 ‘예측’의 대상이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것이 이 땅에서 경험하였던 과거의 경험이다. 식민지시기 조선에 도입된 사회과학은 통치를 목적으로 관찰과 예측을 소홀하게 하였고, 해방이후 현재까지 사회과학은 이데올로기의 각축장 속에서 저항과 운동의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관찰과 예측을 포기한 경우가 적지 않았음이 실증적으로 경험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이 땅에서 관찰과 예측을 충실하게 실천하여 축적한 소위 ‘사회과학’적 결과물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회과학이란 것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내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관찰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그것은 내가 본고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하고 있기에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 심심한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사실인식”이란 관찰과 예측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사실인식”이란 것이 이미 비판을 목적으로 한 사실인식이기 때문에 관찰과 예측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인식은 이미

전제된 비판에 의하여 오염의 존재를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면 모두가 구사하는 인지과정의 속성이다. 비판에 의하여 오염된 눈으로 작동시키는 관찰은 이미 실증주의라는 이름이 내포해야 하는 엄밀성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만약에 이러한 오염과정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사회과학자가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기만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과정을 인식하고도 그 과정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한 관찰과 예측을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가 만드는 위장의 탈을 쓰는 결과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학문이기를 포기하게 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학문이라는 장르가 확보해야 하는 엄밀성의 결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부차적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사회과학이라면, 그 사회과학이란 것은 학문의 장르 밖에 존재하는 사회과학이지 학문이란 장르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비판을 목적으로 하기 전에 대면해야 할 사회과학의 숙명은 '관찰'과 '예측'의 대상이 제공하는 복잡계의 문제이다. 그 복잡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것이 과거 사회과학의 행태였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러한 복잡계의 문제를 상정한 실증주의적 경험과학의 창출이 앞으로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과학이라는 이름하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석'과 '비판'은 인문학의 전유물이다. 인문학의 지위를 찬탈하려는 사회과학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위선이며 독선이다. 따라서 '해석'과 '비판'을 기초로 한 해석학적 비판과학을 목적으로 한 사회과학은 인문학의 아류로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이란 용어의 존재이유에 적실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학문은 인문학과 과학의 양대 산맥이면 족한 것이고, 사회과학은 양대 산맥을 넘나드는 일종의 '박쥐'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과학이든 과학이든 과학이란 글자가 붙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엄밀한 '관찰'과 '측정'에 의한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실증주의가 기초가 되는 경험과학이 우리의 삶을 살찌게 할 뿐이다.

실증주의적 경험과학을 전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해석학적 비판과학이 아니라 실증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상의 자유이다. 사상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실증주의라는 것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주의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되었던가 하는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들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던 분위기 속의 과학이라는 것은 모두 전제정치의 시녀노릇을 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던 경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터득한 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회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사상적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 선부른 해석학적 비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수순이 바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상적 자유의 보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의 경험과학이 산출한 것은 다음 단계에 가능한 '해석'과 '비판'을 흐리게 유도할 수밖에 없다. 나에게 사상적 자유와 해석학적 비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사상적 자유를 선택할 것이다. 사상적 자유의 선택을 저해하는 해석학적 비판이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 해석학적 비판을 팽개쳐버릴 것이다.

2. ‘自想’의 ‘耽羅/濟州學’

지역연구의 발상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던 전쟁구도에서 미국의 행정부와 군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학계의 협조로 시작된 것임은 이미 오래전에 밝힌 바 있다(전경수 1999. 6. 20). 따라서 지역연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주의(colonialism)적 아이디어가 배태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점령지주의(militarism)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출발했던 지역연구라는 것을 어떻게 새롭게 재발명해야 할 것인가의 과제 앞에서 있다. 출발지점에 도사리고 있는 식민지주의와 점령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역연구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지역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성찰 없이는 지역연구의 재발명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제주학을 생각하고, 제주도에 대한 심층적인 지역연구를 기획하였던 초창기에 우리들은 사실상 이러한 성찰의 기회 없이 출발한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에 대한 애착과 제주도가 갖고 있는 과학적 가치에 대한 열망으로만 결합되어 제주학을 출발시켰던 것이 사실이라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전에 제주도라는 지역에 뒤집어 씌어진 보다 더 큰 구도의 지정학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반세기가 넘는 제주학의 역사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제주학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제주도라는 지역의 연구를 위한 근본적인 개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에 대한 실증적 경험의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나는 ‘自想’이라는 나의 신조어를 사용하였다. “스스로 생각한다”는 의미로 自想이라고 적어 보았다. ‘그라스데’식 학문(철학과 현실 1990 겨울, 이명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남에게 의존하여 생각하는 것이 버릇이 되면, 학문은 존재의의가 없다. 왜냐하면,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창의적 사고의 발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학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은 것의 결과는 표절이거나 무의미에 그칠 뿐이다. 식민지주의적 그리고 점령지주의적 의도에 종속된 그리고 그러한 종속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어 온 지역연구라는 것에 대한 기존의 구도에 대한 반성없이 제주도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은 自想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나는 지역연구의 입장에서 제주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첫단추를 끼는 작업이 자상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 제주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용어들에 뿌리깊이 내재되어 있는 식민지주의적 착종들에 대한 반성과 일소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내용이 그러한 반성과 일소 작업의 신호탄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는 ‘탐라/제주학’이라고 적었다. 그것은 “탐라학”만도 아니고 “제주학”만도 아니다. 양자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다. 식민지주의에 젖어든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도 함께 포함하지 않으면 사실인식 과정의 첫 단계부터 오류가 개입된다. 내가 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혐오스러움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사실인식 차원의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주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애증이 얽힌 현상이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애와 증의 어느 한쪽만을 바라보는 것은 삶의 한쪽에 대해서 외면하자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제주도라고 일컫는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제 사실인식의 표현으로서 가장 솔직한 것이 ‘탐라/제주학’이라는 틀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나의 최근 저서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서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3. 重層的 植民主義와 “濟州海女”: 관찰과 사실인식(1)

중층적 식민주의(nested colonialism)라는 용어는 내가 만든 용어이다. 한 지역에 식민지적 지배가 누적적으로 쌓일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예를 들면, 고려의 지배 속에 들어간 탐라의 현상은 식민지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몽골이 다시 그 위에 들어옴으로서 식민지적 경험이 누적적으로 추적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용어이다.

현재의 제주도는 1105년(숙종 10)에 육지에 직접 예속되어 행정구역으로 편입됨으로서 “耽羅”는 국호가 아니고 郡의 명칭으로 전락하였다. 고려는 탐라군을 설치한 뒤 관리를 파견해 이 섬을 직접 다스리게 되었다. 1153년(의종 7)에 군을 현으로 고쳐 14개 현촌을 두었고, 1211년(희종 7)에 “耽羅”를 “濟州”로 개칭하였다. 한 지역의 오래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강압적인 폭력의 과정을 수반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명칭이 엮치락 뒷치락 반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地名 해계모니’에 얽힌 억압과 저항의 역사적 과정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칭을 바꾸었을까? 1271년(원종 12)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여몽연합군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1273년에 패한 후 제주도는 원나라 직할지가 되었다. 원나라의 직할지가 되면서 제주는 1275년(충렬왕 1) 탐라라는 지명을 회복하였다가 1295년(충렬왕 21) 고려에 환속되어 다시 제주로 부르게 되었다. 원의 제국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는 등 원나라의 지나친 간섭을 받았던, 고려 충렬왕(1274-1308) 21년(서기 1295년 乙未)에 최서목사(崔瑞牧使)가 부임하여 탐라를 제주로 개명하였던 것이다. 명칭에 얽힌 역사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로서의 고려가 ‘몽골化’(忠자 왕들의 명칭에서 보듯이)의 정도가 깊어갈수록, 다른 편에서는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북어겨 나오는 것이 인간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濟州”와 “耽羅”의 두 명칭이 교대되는 경험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당시 고려 지배층의 의도는 무엇이이었을까?

巫歌 속에서도 “제주”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면, 민간에 이르기까지 명칭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러 저러한 복잡한 저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관련된 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요섭 일름을 누계라/제주라 일름을 징것는고?/옛날에/수등리도 삼오성제/매옹이도 삼오성제/삼삼구 아옴성제 솟아나/

어깨맞고 잉어맞아/건나온 섬이니/건늘젓제 골죽제 놓아/제주라 일름징굿디다”(진성기 1991. 10. 30: 674-675). 즉 “제주”란 물 건너 있는 고을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지정학적 위치는 半島의 육지 즉 고려이다. 고려의 입장에서 볼 때, “濟州”는 ‘물 건너에 있는 고려의 땅’이라는 말, 즉 ‘식민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부연하면, 이 무가의 가사는 최소한도 “耽羅”가 “濟州”로 개명된 이후의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國으로서의 “耽羅”는 1105년 “耽羅郡”으로 실질적으로 명목상으로 강등되었다. 1295년 “耽羅郡”이라는 명칭은 “濟州牧”으로 바뀌었다. 고려에 복속된 후 190년간의 통치 기간이 지난 뒤에 명칭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키나와의 경우, 일본의 사츠마가 1609년 유구국을 침공하여 경제적인 지배의 상태를 경험한 270년간이 지난 뒤인 1879년에 “沖繩縣”으로 명목상의 강등과 함께 “琉球”는 하나의 國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한 현으로 편입된 사실이 있다.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270년간 간섭 후 명칭변경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다. 한 지역의 명칭변경이라는 것은 정체성의 박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으로 이해하고 싶다. 정치적 실체로서의 國을 복속한 이후에도 주민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명칭은 선불리 변경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경험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耽羅”라는 명칭이 완전히 공식적인 타이틀의 지위에서 사라지게 되는 시기는 고려 충렬왕 시기인데, 충렬왕의 비는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元 世祖의 딸, 몽골 이름은 忽都魯揭里迷失)이며, 이 시기의 제주도는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 소속이 여러 차례 바뀌는 복잡한 과정을 겪다가 1367년(공민왕 16)에 완전히 고려에 속하였다. 즉 원나라가 고려를 식민지로 지배한 시기에 제주도에 탐라총관부가, 고려에 쌍성총관부가 존재하였다는 것은 원나라의 통치기간 동안 제주도의 정치적 지위가 격상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탐라의 명칭과 관련된 시기들로서, 1295년은 715년 전의 일이고, 元 이 멸망함으로써 탐라명칭의 원인소멸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원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 1367년(공민왕 16년)에 제주로 고착된 것이다. 즉 만약에 지금 제주를 탐라로 개명을 하게 되면, 640여년 만에 탐라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즉 탐라라는 단어의 부활이 6~7백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韓”이란 명칭이 한국사상에서 부활한 것이 소멸 뒤 약 1700년 후라는 점과 비교해볼 때, “耽羅” 명칭의 회복에 관한 논의는 해볼만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비교 관점은 논의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도 하다. “三韓”의 “韓이” 역사상에서 사라진 시기가 3~4세기 경이라고 추정할 때, “耽羅”가 사라진 것과 비교가 가능할 수 있다. 국제적 간섭의 위기에 봉착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과 주변의 간섭이 각축하는 과정에서 대한제국으로 명칭변경을 시도하였던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韓”이란 단어가 부활하는 것은 1700년 이상 사장되었던 개념의 부활인 셈이다. 최대로 늦게까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하여 기원후 300년에는 “韓”이라는 국호나 지명이 사라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시도는 궁극적으로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지향하는 것이

라고 생각된다. 1897년 등장한 대한제국의 “韓”의 배경은 “我邦乃三韓之地而國初受命統合爲一 今定有天下之號曰大韓未爲不可”(《고종실록》 제36권 고종 34년 10월 11일)과 “及高麗時吞竝馬韓辰韓弁韓 是謂統合三韓 … 定有天下之號曰大韓”(《고종실록》 제36권 고종 34년 10월 13일)이다. 정체성의 본질에 도전하고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 1700년 이상 사장되었던 “韓”이란 용어를 복권시켰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진정한 자치는 개념의 탈식민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탐라 고유명의 부활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정면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나는 “自治道”라는 것의 배경이 植民知(colonial knowledge)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自治植民地”란 영국식의 間接統治(indirect rule)를 적용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서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자치식민지의 구상을 제시한 일본의 지식인들이 포진하고 있었다(伊藤博文, 福田德三, 泉 哲 등). 그들은 정략가들이자 지식인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伊藤 統監의 피살로 일본 내부에서 강경파가 득세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강경파의 주장은 조선에 대하여 직접적인 武裝統治로 선회하게 되었다. 그때 자치의 아이디어는 사라졌던 것이다.

그러나 “自治植民地”라는 것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모순 덩어리의 소산이다. 지금 “耽羅”에는 “自治”植民地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濟州特別自治道”로 만족해서 희희낙락하고 있는 현상이 자못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란 “자치식민지”라는 용어와 거의 유사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담지 못하고 있는 “特別”이란 용어만 제외하면, 양자는 의미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耽羅道”라는 명칭에는 “特別”과 “自治”의 의미가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성의 사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標準語”라는 것은 식민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 발음이 퇴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싶다. 발음이라는 것은 구강구조(몸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逆으로 발음이라는 것은 구강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발음이 변질된다는 현상은 기억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발음의 퇴화는 몸의 기억을 퇴화시키는 셈이 된다. “으르첸”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으르첸”에 근사한 발음으로 자신들이 가능한 구강구조를 동원하여 발음한 것을 “오로촌”이라고 적었다. 사실상 “·”의 음가는 제주도과 북만주의 으르첸 거주지역에 살아 있다.

나는 그 “·”음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을 아이덴티티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동대지진 때, “즈, 츠, 쓰” 등의 발음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조선인들이 그 발음의 불가능성으로 표적이 되어서 타살 대상으로 지목되었고 결국 조선인 집단학살의 역사적 사실로 남게 되었다. 결국 음가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스와힐리어가 일종의 링구아프랑카이다. 그 속에 분산되어 있는 부족들의 언어들도 서로 다르다. 스와힐리어가 여러 부족들간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언어만으로는 부족들간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부족간의

영역분쟁에서는 언어가 아니라 춤 동작으로 부족을 구분한다. 춤 동작을 보고, 영역을 침범한 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영역침범의 사례로 발각이 되면, 타살의 대상이 된다. 발음으로 구분이 되지 않으니, 춤으로 즉 몸동작으로 구분을 시도하는 것이다. 발음의 문제는 몸동작과 같은 것으로서 몸의 기억인 셈이다.

역사와 언어의 문제들을 모두 고려한 지명과 현상에 대한 명명을 생각한 결과, 나는 일각에서 “濟州海女”라고 쓰고 읽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은 일종의 重層的 植民知의 한 사례라고 단정하고, 그것은 극복되어야 할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 대신에 復權概念으로서의 “耽羅좁수”라는 용어를 제안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耽羅”라고 불리고 인식되었던 시대의 문서에 이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바다와 관련된 생활방식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좁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4. 海軍基地와 濟州特別自治道: 관찰과 사실인식(2)

등터진 새우 신체의 역사에 관련된 농담 한 마디로 나의 논리를 전개하려고 한다. 농담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도를 지나친 것이긴 하지만, 본고의 논리전개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깊은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만약에, 그야말로 만약에, 중국 대륙의 漢族 13억 명 중에서 1억 5천만 명이 어느날 갑자기 한반도를 향하여 걸어내려 와서 한족 두 명이 한국인(북조선인 포함) 한사람을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끝도 없이 걸어 가버리면, 이 땅의 한국인(북조선인 포함)은 순식간에 씨가 마른다. 그러나 중국 대륙 한족의 분포지도에는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별로 커다란 변동없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일 것이다. 過弄非弄인가.

1840년 아편전쟁으로 시작된 중국(청나라)의 붕괴, 뼈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난 현대중국 이 그 아픈 상흔의 과정을 잊겠는가? 2040년이 되면 아편전쟁 발발 200년 주년이 된다. 여기까지는 사실이다. 사실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아편전쟁은 왜 일어났으며, 그 후 중국은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밀한 사실 집적이 필요하다. 그 과정이 반면 교사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사라는 거울밖에 없다. 역사라는 거울을 대하고 자신을 성찰한 중국은 아편전쟁의 가해자인 서양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의지와 그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 부분은 사실 인식에 기초한 예측이다. 관찰과 예측의 결합으로 삶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 구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학자들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구도와 구도가 요구하게 된 체계의 과정에서 한국은? 제주도? 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과 예측을 번갈아서 논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과 중국이 경험하였던 역사로부터 발신된 축이다. 이 축은 무시할 수가 없다. 地政學의 문제다. 일본으로부터 발신된 축은 오키나와의 역사적 경험이다. 여기에 미국으로부터 발신된 축이 가세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항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는가? 거문도사건은 왜 일어났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일단은 일차적으로 세 방향으로부터 발신된 축들의 경합 상태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그 속에서 제주도의 역할은? 이라는 구도이다. 이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유보되었던 러시아로부터 발신되는 축의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축은 적절한 타이밍에 지렛대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러한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2002년 후진타오의 집권 이후 대양해군 건설에 박차를 가해 왔다. 중국의 대양해군 건설은 해상 수송로 확보와 주변국과의 영유권 갈등에 대비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05년 이후 과학기지의 일부가 건설되어 있는 '이어도'에 대한 감시활동과 자국 영토 주장을 강화하는 등 영유권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 서남해의 원유 및 가스매장량에 대한 일각의 추정은 70억 톤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제주도 남쪽 해역은 한국 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해상수송로로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안보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대양해군 건설의 초석이 되고 제주도민에게도 안보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보루가 돼야 한다. 해군은 당초 조감도에서 보여준 대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친환경적 명품 군항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제주도민을 향하여 천명해야 하며, 그 약속은 도지사의 감독하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법적, 행정적 장치로 보완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국이 해양팽창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고, 중국이 인식하는 해양위협을 제거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와 관련된 영토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것을 島連鎖(Island Chains, 섬을 연결한 방어선) 전략이라고 이른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제1도련선(센카쿠섬-타이완-필리핀-스프래틀리군도로 연결되는 선)으로 진출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2050년까지는 제2도련선(괌-북마리아나군도-호주로 이어지는 선)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건조는 도련선 전략의 추진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임이 틀림없다. 2020년까지 중국은 3만~4만 톤급 중형 항공모함 2척과 6만 톤급 핵추진 항모 등 4~6척의 항모를 건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민간단체들이 과연 전시작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일개 소대라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민간단체들에 있는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의 역학관계를 바라보는 낭만적인 관점들을 경계하고자 한다. “군축”이라는 단어 하나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동아시아 역내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간과할 수 없고, 현재 상황으로는 “永世中立國”의 보장도 전혀 없는 한반도, 그리고 남북이 군사적 충돌 상황을 지속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군사와 외교에 관한 최고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반대의견도 중지들 중의 하나라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현대의 고도로 기계화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중 전력을 제외한 해상 작전만으로는 군사행동의 제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해군기지가 공중 전투력을 확보하든지 공군이 해군과의 긴밀한 작전수행을 위한 군사비행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해군기지와 긴밀하게 연결된 비행장으로서 ‘알뜨르 비행장’에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연구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는 적극적인 참여의 좌석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근대문화유산 제39호로 지정된 알뜨르비행장은 제국일본의 군부에 의해서 1926년부터 1936년까지 10년간의 공사 끝에 완성된 후 1937년 중·일전쟁 때 처음 사용됐다. 남북방향으로 길게 들어선 활주로는 길이 1,400m, 폭 70m 규모로 잔디를 깔았다. 이후 나가사키현의 오무라 항공기지가 이곳에 주둔해 중국 난징과 상하이 등 중국대륙공격을 위한 해양폭격거점으로 활용됐다. 당시 이곳에서 출발한 일본군 전투기의 난징 공습은 36회였고, 연 600기의 전투기가 총 300톤의 폭탄을 쏟아 부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비행장 건설에는 제주도 사람은 물론 육지에서까지 동원돼 강제 노동을 했다. 폭 20m, 높이 4m, 길이 10.5m 규모의 격납고는 총 20개. 당시 ‘아카툼보’라고 불렀던 전투기를 은닉하였던 시설이다. 이 중 19개는 현재까지 원형을 잘 지니고 있다. 격납고 인근 활주로와 지하벙커, 방공호, 셋알오름 고사포진지, 고사기관총진지, 송악산 해안 자살특공대정진지 등도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공군기지로서의 알뜨르 비행장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은 군사적 긴장관계 속에 놓여 있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환경을 애써서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알뜨르 비행장의 공군기지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제주도에 새로운 군항이 들어서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 협약들에 의해서 신항은 미군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군항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이 기항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그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동아시아의 군사구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의 주권은 어떠한 모양새로 지켜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 글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하나는 군사기지의 건설과 관련시설의 도입이라는 과정에 즈음하여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주체적이고도 적극적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 계획의 실천과정에 제주도민의 참가를 보장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행정적 지위를 부여한만큼 그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계획과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배제하지 말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주민과 도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는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군사기지가 건설된 이후에는 그 관리 과정에서도 주민과 도측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군사기지의 책임자가 인사이동에 의하여 전역과정을 거칠 경우에는 반드시 도지사에게 신고식을 하도록 하고, 군사기지 내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이동에 대해서도 제주도의 상황실에 日報식의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군사기지의 경우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특수한 군사장비, 예를 들면 핵장치의 물적 자원이 제주도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락이 필요한 법적 장치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제주도내에 주둔하게 되는 군사기지

내의 인력과 물자는 제주도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는 인구이동과 물자이동의 차원에서 군사기지의 인적 물적 자원의 변동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오키나와의 경우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지역협력관(community relations specialist) 같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일본의 '소파'는 한국의 '소파'와 어떻게 다른지? 유럽의 '소파'와 일본의 '소파'는 어떻게 다른지?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배경으로 대비를 하는 작업과정이 필요하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선처해주는 사람은 없다. 모두 스스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4·3사건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한 제주도라는 점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휴전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해서 필요한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가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의 지위보장이 확인되는 단계까지는 군사기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설령 그것이 “惡”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악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요소인 것은 역사적 경험들이 증언하기에 충분하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경을 면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다. 국경을 면하고 있는 해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으며, 특히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를 고려할 때에는 270년간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국가를 유지해왔던 유구왕국의 지혜를 읽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스위스의 영세중립국 확보과정의 지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할 때인 것이다.

해군기지를 비롯한 각종 군사기지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와 행동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대의 목소리와 행동은 협상력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수적이며, 협상과정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반대 목소리는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 목소리는 내부갈등의 원동력으로서 전환될 수밖에 없고, 내부갈등의 에너지원으로 작동하는 반대 목소리로만 자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치력을 상실한 지도자의 부재를 증명하는 꼴이 된다.

4. 결어: 위기와 기회의 예측

나는 사상적 자유가 전제된 실증주의적 경험과학이 우리 세대가 천착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을 한다. 관찰과 예측의 대상이 된 '사회'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19세기 이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지배되고 속박되었던 상황이다. 학문이라는 이름하에 끊임없이 수입된 것들을 '그라스대'(카더라)의 수준으로 이식해온 점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이 없으면, 이 땅에서 학문이 존재할 공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비판을

목적으로 설정한 관찰과 예측이 준동하고, 그러한 과정을 ‘사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횡행하는 것은 학문도 삶도 모두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사회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전개되고 있는 많은 ‘운동’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일종의 ‘위장취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학문과 운동은 엄밀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양자가 협동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자가 뒤섞여서 오리무중의 상황을 전개하는 사회과학이 존재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부업(운동)이 주업(학문)의 지위를 찬탈할 목적으로 활동한다면, 그것이 위장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고, 그것은 또한 진리에 대한 배신이 되는 셈이다.

地名 헤게모니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나는 “제주”라는 단어의 포기를 주장하고, 그 대신에 정체성 복권과 관련된 용어로서의 “耽羅”를 제안하였다. 동시에 물질에 관련된 키워드인 “海女”가 내포하고 있는 植民知의 문제를 제기하여, 토속명인 “잠수”로 대체할 것도 제안하였다.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체성(아이덴티티)의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시도이기도 하다.

해군기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이 섬이 위기의 상황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기회의 상황을 맞을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의 관찰 과정과 사실인식을 통해서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의 예측을 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 인간사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비가역적이다. 내가 여기서 위기의 상황을 거론하는 것은 오키나와의 선행경험에 대한 사실인식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의 상황 즉 양속지배의 오키나와 상황과 같은 위기의 현상이 이 섬에 엄습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군사기지의 상륙을 기회의 현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기로에 선 이 섬의 운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측은 가능하다. 위기의 예측과 기회의 예측. 어느 쪽일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결과가 애기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라는 과정을 동원하여 기회의 방향을 생각하는 것은 이 섬에 대한 그리고 이 섬에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기회의 예측을 구상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기로에 선 이 섬의 장래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체성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명칭문제를 거론한 것임에 대한 충정을 이해해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참고문헌

- 김세균 2011. 7. 20 “들어가며”, 학문간 경계를 넘어, 김세균 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8~18.
- 전경수 1999. 6. 20.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 서울대출판부.
- 진성기 1991. 10. 30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서울: 민속원.

**필자소개: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1982년 이래), 현재 운남대학(중국) 객좌교수,
동아시아인류학협회 회장(2011년~2013년)
제주학회 회장 역임. 문화재 위원 역임. 한국문화인류학회 회장 역임.